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미은



지난 4월 말 광주 라마다호텔에 내로라하는 문화예술인들이 속속 모여들었다. 미술, 국악, 음악, 무용 등 다양한 장르에서 예술적 성과를 이룬 이들이었다. 이날 모인 예술인들에게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65세 이상의 원로 예술인이라는 점이다.

‘자신의 문화 예술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업적을 이루었고 현재도 창작 활동을 하는 65세 이상인 자’로 회원을 규정한 광주문화예술인회(회장 범대순·이하 예술인회) 창립 총회에는 50여명의 발기인들이 참여했다.

문화 현안 방향 제시 등 역할

지역에는 크고 작은 문화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이번에 출범한 예술인회에는 그 존재감이 상당하다. 행사에 참석해 강연대 시장 역시 “모임 자체가 의미가 있다. 경험과 경륜을 후배에게 알려주고 문화 정책 등 주요 사안들의 방향과 속도를 조정해 주길 바란다”고 축사를 했다.

회원들은 창립선언에서 ‘단체의 으뜸 목표는 적극적인 창작 활동의 중심에 있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고 지역과 전국적 문화 예술적 현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외 문화단체와의 교류, 문화행사 개최, 후진 발굴 등을 사업에 포함시켰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지향하는 광주는 현재 많은 현안들을 갖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원로들의 제언과 고언은 꼭 필요하다. 중심 없이 흘러가는 지역 문화계의 흐름을 잡는 것도 역시 원로들이 할 일이다. 무엇보다 수십년 동안 자신의 분야에서 업적을 일궈온 그들이 창작 활동을 계속 하지 않겠다고 자기 다짐을 하는 부분은 후배 예술인들이 새겨들어야 할 대목이기도 하다.

원로예술인 모임의 명과 암

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개인적으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회원들의 영향력 행사다. 광주 뿐 아니라, 대부분 지역에서는 몇몇 토착 세력들이 문화관을 좌지우지하는 경향이 있다. 각종 기금 심사와 회장 선거 등에서 제자 쟁기, 자기 사람 심기 등으로 영향력을 보이는 이들이 존재한다. 이날 총회에서 사회자가 이야기했듯 회원들 면면은 모두 단체의 회장이나 이사장을 할 만한 사람들이다. 이 점을 감안하면 예술인회가 광주시 등에 행사하는 무

인의 압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벌써 일부에서는 앞으로 일하기 힘들 것 같다는 하소연도 나온다. 여기에 행여 예술인회를 등에 업고 자신의 세를 과시하려는 몇몇 중간·신진 예술인들의 부적절한 행위까지 더해진다면 폐회는 불보듯 뻔하다.

광주시와의 관계 정립도 중요하다. 단체장의 결심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게 문화 정책인데 시장이 깎듯이 ‘선배님’으로 모시는 예술인회 회원들이 개인적 인맥을 동원, 큰 자본을 차지하거나, 시의 문화정책에 자칫 들러리로 동원될 우려도 있다.

‘문화권력’ ‘옥상옥’ 우려도

새로운 단체의 출범 앞에 너무 부정적 의견만 쏟아놓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만큼 예술인회의 역할이 문화계에 미치는 역할이 크다는 걸 강조하자는 뜻이다. 이 모든 우려가 지나거나 후배 예술인들의 슬데 없는 오지랴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신의 예술세계를 구축한 원로 예술인들이 앞에서 끌고, 내공을 쌓아가는 중견 예술인들이 든든히 허리를 받치고, 피끓는 청년 예술가들이 넘치는 끼를 발산한다면 광주는 진정한 문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예술인회 출범으로 지역 예술계가 든든한 후견인을 얻은 것이기를... <문화생활부장> mekim@kwangju.co.kr

기고



유병진

지난해부터 스마트폰의 열풍이 지속되면서 아이폰, 갤럭시S 등의 단말기가 짧은 기간 동안 무려 700만대가 보급되었고 올해 말까지는 2천만대 보급이 예상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스마트 워킹’(Smart Working)시대가 현실화 되고 있다.

스마트폰이 모바일 혁명을 주도하면서 파생적으로 ‘사무혁명’과 ‘경영패러다임의 혁신’ 그리고 ‘스마트 워킹’이라는 말을 등장하게 했다. ‘스마트 워킹’은 국가, 기업, 개인의 당면과제 해결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기업 임직원의 생애 관리(Life Time Care) 및 사회적 기업들의 이미지 향상을 위한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2015년 전체 노동인구의

스마트 워킹(Smart Working) 시대

30%를 스마트워킹 근무를 목표로 공직사회에 우선 도입을 추진하고 민간기업의 참여 유도를 위한 다양한 세제 감면 혜택 등의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한다. 또한, 외국 선진국가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등은 10여 년 전부터 21C 당면과제 해결의 수단으로 일하는 방식(Work Style)의 변화를 시작하는 등 스마트 워킹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원격근무제 도입, 재택근무, ICT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기업 문화를 혁신하였다. ‘스마트 워킹’이란 기존 사무실이라는 고정된 업무공간에서 벗어나 주거지, 교통요지 인근에 마련된 IT기반의 복합업무 공간에서 업무처리를 통해 업무 효율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를 말한다. ‘스마트 워킹’은 근무형태에 따라 재택근무(Home Working), 이동근무(Mobile Working), 유연근무(Flexible Working), 고정근무(Fixed Working)로 구분된다. 재택

근무는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형태이며, 이동근무는 다양한 현장중시 형태의 근무형태로서 업무특성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동이 필요한 직무에 적합한 근무형태이다. 유연근무는 사무실, 이동 등 다양하게 근무하는 형태도 업무특성상 근무지를 고정적으로 지정하기 힘들어 유연하게 정의해야 하는 직무에 적합한 근무형태이다. 고정근무는 기존 사무실 근무형태로서 고정된 사무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효과적인 직무에 적합한 근무형태를 말한다. ‘스마트 워킹’ 도입시 기업은 차량을 이용한 출퇴근이 감소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고, 또한 사회 혼잡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직원들은 가족의 간병, 취학, 육아, 출산, 부양 등에서 이전보다 훨씬 자유로워 창의적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여가시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업무자료 유출 등 보안상의 문제는 해결해야

은펜클럽



최희동

정의로운 국가가 요즘 시대의 화두로 등장했다. 허버트대의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저서가 인문학 책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판매부수를 기록하면서 정의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마이클 샌델 교수는 ‘서로 다른 윤리적, 도덕적 가치가 경쟁할 수 있는 사회, 의견 불일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첫 번째’라고 말하고 있다. 곧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와 달리 다름을 인정하는 사회라는 것이다.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자 그리고 진보주의자가 공존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나의 사상이 존중받아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사상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

5·18에 다시 생각한다

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일까? 부당한 특권과 권력의 남용을 용납하지 않는 나라, 선량한 시민의 억울함을 방관하거나 절망의 나락으로 내몰지 않는 나라, 개인의 자유가 샘물처럼 넘쳐흐르고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조건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나라를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만으로 만들어 낼 수는 없다.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지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정의를 최고의 선으로 생각하고 그 가치를 지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진 국민의 몫이 때문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가 무엇인지 자각하고, 자신의 삶에 대해 책임지며,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타인과 공존하고,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국민만이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가나 타인이 침해할 수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의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인간으로서 무엇

보다 먼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다. 독재정권 하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을 제약받았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다반사였고, 억울함이 있어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으며, 권력의 남용과 부당한 특권에도 눈 감아야 했다. 물론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는 박탈되었다. 1998년 2월, 우리는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되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2008년 2월 그 권리의 일부를 상실하고 만다. 미네르바와 네티즌, 촛불집회에 참가자와 MBC PD, 용산 참사 등이 그 걸 증명하고 있다. 물론 정의로운 국가라고 해서 국민이 모든 것을 똑같이 분배받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에 명시된 국민의 권력(국가의 정당한 강제력)은 경쟁의 원리에 의해서만 배분되며, 그 권력의 위임자를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곧 국민의 호감을 얻어야만 공권력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기에 국민에게 주어진 권력을 위임받기 위한 경쟁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다. 엄청난 거짓말로 대중을 현혹할 수도 있고, 잠깐의 공약을 남발할 수도 있다. 또한, 자신을 과대포장하기도 한다. 마음은 꾀밥에 있으면서 입으로는 달콤한 사랑발림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사람도 많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많은 정치인이 국민의 권력을 배분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 자신의 중요한 권리를 사탕발림이나 눈속임에 현혹되어 우리의 기본적 인권을 박탈당하는 일이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지역감정이나 지역주의 본질을 획책하는 정치인에게 위임해서도 안 된다. 누가 진정으로 국민을 자유롭게 하고 국가를 정의로롭게 할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한다. <전남대학교총동창회 상임부회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 합니다. 은펜클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불성실한 지자체 의원들 시민이 감시해야

지방의원들이 의정보다 유력 정치인과 악수하는 게 우선이고, 회의에 참석조차 않는 의원도 수두룩하다고 한다. 오죽하면 시민들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월급을 토해내라”고 촉구하거나 심지어 소송을 내겠다고까지 하겠는가.

‘말하면 중 부리고 싶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지방의원들에게 딱 맞는 표현인 듯 하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에게는 많은 액수의 월급이 지급되고 있다. 처음에 지방자치제를 시작할 때 지방의원들은 무부수 명

에직으로써 오직 ‘지역 발전과 내 고장 향토의 머슴이 되겠다’며 시작했다. 그런데 이런 저런 이유로 보수를 조금씩 받더니 지금은 월급을 받아가고 있다. 현재 광역지방의원들의 연봉은 자그마치 5000만 원 정도에 별도로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회의수당을 챙긴다. 심지어는 해외여행 경비까지 받는다. 문제는 보수를 받아가는 만큼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점

이다. 지방행정을 감시하라고 뽑아놨더니 생선가게에 고양이를 들여놓은 플로써 즉 세금만 추내고, 회기 중 출석도 안 하고 있는 의원들이 적잖다. 앞으로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해야 하겠다. 유권자들은 더욱 냉철해져야 한다. 월급 값 못하는 지방의원이 있다는 것은 의원의 책임 말고도 시민단체와 유권자의 부실한 검증과 선택의 책임도 있음을 알아. ▲유병희·광주시 북구 신용동

시설

‘오월 정신’으로 국민통합·국가번영 이뤄야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한 세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되는 뜻깊은 날이다. 군사독재에 맞서 피로 이 땅에 민주화의 초석을 이룬지 31돌이 된 것이다. 민주, 정의, 평화와 위해 목숨을 바친 민주영령들을 추모하며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는 유족과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건넨다.

5·18 31돌을 맞는 우리의 마음은 착잡하기만 하다. 광주의 송고한 희생으로 지켜낸 민주주의와 인권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고, 한반도는 평화와 공존보다는 냉전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론은 사분오열되고, 지역갈등과 지역차별은 위험수위를 넘나든다. 민생은 실종되고 양극화만이 심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 전반이 대립과 갈등으로 점철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안타깝고 여처구니없는 일은 일부 세력의 끊임없는 5·18의 왜곡과 폄

하 시도다. 심지어 5·18 기록물의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를 해방 놓는 패륜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월 광주’의 정신과 이념은 결코 퇴색하거나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단순한 과거의 사건이 아닌 영원히 우리 곁에 살아 숨 쉬는 현재의 역사가기 때문이다. ‘오월 정신’은 새롭게 부활해야 한다. 민주, 인권, 평화라는 소중한 자산을 계승해 국민통합과 국가번영을 이뤄내야 한다. 민주주의를 다시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국력을 결집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오월 영령들의 송고한 희생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오월 광주’는 현재 진행형이다. 따라서 오월 정신을 현재와 미래의 보편적 가치로 되살려 새로운 세대의 ‘시대 정신’으로 우뚝 서게 해야 할 것이다. 오월 영령들의 명복을 빈다.

사라지는 5·18 사적지, 이대론 안 된다

광주민주화운동의 아픔을 간직한 5·18 사적지 29개소 중 16개소가 당시의 모습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변형되거나 아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6개소 가운데 광주YWCA와 녹두서점 옛터 등 5개소는 이미 흔적을 찾기 어렵고 전남대 정문과 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지 등 11개소는 각종 개발공사에 따라 당시의 현장과는 모습이 크게 달라졌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남동성당 등 원형이 보존된 10개소 중에도 5·18 당시 악명을 떨쳤던 보안부대와 국군 광주병원, 광주교도소 등 6곳은 향후 개발되거나 변형이 불가피해 ‘말 안된’ 사적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옛 보안부대와 국군 광주병원 부지는 전혀 관리를 하지 않아 현재 성한 건물을 찾아볼 수 없고, 사실상 복구할 수 없는 상태다. 광주교도소 역시 이전이 임박했으나 구체적인 건물과 부지 활용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다.

5·18의 흔이 갖는 사적지가 이처럼 사라지거나 변형된 데는 정부와 광주시가 체계적인 보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사후 처리에 급급한 때문이다. 사적지가 문화재 보호법의 대상이 아닌 광주시 조례로 정해 놓다 보니 사유지와 국유지에 속한 사적지는 사실상 관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이들 사적지 원형 보존과 정비를 위한 재정지원, 사적지에 대한 재산권 제한 등 법적·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다. 5·18의 현장이자 정신인 사적지가 남아나지 않는다면 5·18에 대한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5·18을 통해 광주를 민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고 자임해 왔으면서도 정작 사적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5·18 민주화운동의 발자취를 다시금 복원하고 이를 후손에게 물려주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다.

無等鼓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석유는 현대 사회를 움직이는 대표적인 에너지원이다. 1973년 1차 오일쇼크 당시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석유를 장악하면 세계를 지배한다”고 말했으며, 석유왕 록펠러는 석유를 ‘악마의 눈물’이라고 불렀다. 석유를 둘러싼 국가 간 전쟁과 갈등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석유는 오늘날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세계 패권의 원천이다. ‘세계의 화약고’로 불리는 중동이 최근 들어 세계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이유도 바로 석유와 천연가스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이다. 지난 1908년 이란에서 석유가 처음 발견된 이후 중동은 미국과 유

확보와 이스라엘의 안보, 그리고 이슬람 위협 제거로 요약되는 미국의 중동 전략 목표는 지금도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테러와의 전쟁’으로 위장돼 중동지역 이슬람 국가들과 숭한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 16일 아프가니스탄 내 한국지방재전팀(PRT)이 로켓포 공격을 받았다. 오사마 빈 라덴 사살 이후 세 번째인 이번 공격은 탈레반의 소행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 공격받는 이유는 한국이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참여하는 등 미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6.25 전쟁으로 패자가 된 국가를 재건하는데 미국으로부터 적지 않은 도움

지원전쟁



을 받았으며, 지금까지도 미국의 핵우산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다. 냉엄한 국제관계에 따라 싫든 좋든 미국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서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인 셈이다. 세상살이가 그렇지만,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홍행기 정경부처장redplane@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회장 金鐘元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 논설주간 申浚榮 | 편집국장 曹庚完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남영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 | | |
| 대표전화 222-8111 2200-551 <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 문화생활부 2200-661 | 경영지원국 2200-515 | 문화홍보국 2200-541 |
| 편집부 2200-649 | 어른매부 2200-621 | <F A X 222-8005> | <F A X 222-0195> |
| 정경부 2200-612 | 체육팀 2200-697 | 광고이케팅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
| <대표 FAX 222-4918> | 사진부 2200-693 | <F A X 227-9500> | <F A X 227-9500> |
| 사회부 2200-616 | 조사부 2200-573 | 디자인 2200-536 | 서울지사 02-773-9331 |
| <대표 FAX 222-4267> | 전산팀 2200-685 | 기획사업국 2200-555 | <F A X 02-773-9335> |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 | |